

건설사 채권 1조 위조… 옵티머스 배후에 ‘큰손’

가짜 양수도 계약서 만드느라 밤새 도장 위조 채권으로 펀드 발행… NH증권 ‘총대’ 대기업, 노조, 전파진흥원, 정치인 등 투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이 건설사 인감과 은행 천공(해당 기관의 이름을 종이에 구멍을 뚫어 남기는 인증 방식)을 위조해 1조원대 가짜 매출채권 계약서를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는 가짜 매출채권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건설사 인감을 직접 파고 은행 천공을 찍는 기계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기’ 핵심은 매출채권 서류 위조였다. 옵티머스는 관급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이런 매출채권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채권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넘어가게 되면 은행 측은 채권을 사기 위해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확인한다. 해당 계약서에는 건설사가 매출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설사 ‘인감’과 수탁사가 이를 양수했음을 확인하는 ‘천공’이 있어야 한다. 인감과 천공이 계약서에 찍혀 있어야 건

설사 매출채권이 수탁사에 넘어갔다고 증명되는 것이다.

실제로 옵티머스가 판매사 등에 제시한 176건의 양수도 계약서에는 민간 건설사 4곳(STX·동양·정인·호반)의 인감과 하나은행의 천공이 들어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건설사 인감은 옵티머스 직원들이 직접 찍고, 하나은행 천공을 찍는 기계까지 따로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들은 자사 명의가 펀드 서류 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정기관에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쓴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회사는 그런 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매출채권도 없고 옵티머스와 거래도 처음 들어보는 애기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STX건설의 경우 옵티머스의 부탁을 받고 가짜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어줬다. STX건설 관계자는 사정기관에

“해당 매출채권이 존재하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위조된 양도양수 금액은 계약서상 총 1조854억원(호반건설 4508억원, 동양건설 3327억원, 정인건설 2001억원, STX건설 1018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 4명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호반건설은 관련 위조 행위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옵티머스는 이렇게 위조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근거로 펀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펀드에 굴직한 대기업·대학법인·병원·전파진흥원·자금운용사들과 정치인 등 유력자 등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옵티머스펀드 관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금융사들은 안전장치 역할은 커녕 옵티머스의 사기행각에 그대로 속아넘어 가거나 오히려 방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판매사 가운데 지난 7월 21일 기준 옵티머스 펀드 설정원본 5151억 원의 84%에 달하는 4327억 원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6월 18일에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상품 설명을 듣는 상품승인소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김 대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



NH투자증권 정연채 사장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진=시장경제DB

는 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매우 안전한 상품이다.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매출채권인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거짓말을 했다.

NH투자증권 측은 당시 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매출채권 대금을 자회사에 지급하는 구조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검토 보고서’만 믿고 펀드 판매를

승인했다.

이 같은 투자 움직임은 옵티머스 배후에 어떤 ‘큰손’이 있다는 확신을 갖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경민 기자 bamboo8775@naver.com

김재현 “나한테 책임 다 넘기려 한다”

옵티머스 대표, 첫 재판부터 ‘막장 드라마’ “내가 정·관계 로비한 것처럼 언론에 유출” 주장

5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측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비화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은 본건과는 무관함에도 한쪽의 입장만 보도되면서 마치 김 대표가 정·관계 로비를 하고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1조190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활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최근에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김 대표 측은 자신과 함께 재판받는 옵티머스 사태 공범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재판 증거들을 언론

에 유출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 2대주주 이모(45) 씨와 윤석호(43)·송모(49)옵티머스 이사,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 등과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는다.

김 대표 측은 “소송자료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기도 했으며 억측도 나오고 있다”면서 “형소법상 열람·등사 서류는 당해 사건 이외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피고인 등이 열람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단편적으로 왜곡해 언론 등에 유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김 대표 측은 “재판에 지장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도 “이 사건 증거기록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이다. 등장인물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있다”면서 “수사 진행에 매우 심각한 일이며, 어떤 변호인이 어떤 의도로 증거기록을 제보했는지 알 수 없으나 재판에서 밝혀질 실제적 진실이 언론으로 인해 왜곡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소사실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거나 예단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전혀 염려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김 대표 측은 “검찰 측에서 (유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4일 기존 수사팀과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 9명에 타청에서 파견된 검사 5명,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원한 검사 4명 등 18명 규모의 옵티머스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정·관계 의혹까지 불거진 옵티머스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6월 옵티머스 수사에 착수했으나 4개월간 정·관계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동우 기자 dwk@newdailybiz.co.kr

예탁원이 사채를 ‘공공기관 채권’으로 바꿔

‘정체불명’ 옵티머스 요청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 이명호 예탁원 사장 “송구하다”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준 사실이 20일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탁원이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일단 송구하다”고 답했다.

예탁원은 2016년 4월11일부터 지난

5월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씨피엔에스·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예탁원이 실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줬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예탁원 펀드 자산명세서와 예탁원이 옵티머스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안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요청이 있었고,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무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됐음에도 예탁원이 최소한

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어 “다른 사무관리 회사에 문의해보니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해달라는 것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한다”며 “단순 실수라고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 공공기관인 예탁원이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바꿔준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사무관리사는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예탁원의 사모사채 관련 의혹은 지난 4월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손혜정 기자 jujuq25@newdaily.co.kr

빅데이터로 보는

진짜 뉴스

진짜 민심

빅터뉴스

데이터 저널리즘의 새 지평

BIGTA NEWS

빅터뉴스 · 워드미터

bigtanews.co.kr